

강원 경제단체 통합 협의체 구성 주목

도내 경제단체를 통합하는 협의체가 생길지 주목된다.

최문순 지사는 최근 도내 16개 경제 관련 단체의 모임인 강원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최돈진·이하 중단협)에 미가입한 경제단체를 확대 가입해 강원경제를 아우르는 범경제단체모임을 제안했다. 최 지사의 이러한 제안에는 도내 긴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 시 다양한 경제단체와 일일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최문순 지사 도내 각종 업체 포함한 '범경제단체모임' 구축 제안 중단협 오늘 논의... 일각 "중소 보호 등 전문적 역할 수행 의문" 지적

현재 중단협에는 중소기업, 여성경제 단체, 융합,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가입돼 있어 도에서는 이를 확대해 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대한건설협회 도회도 포함, 규모를 키울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농·어업, 축산업 관련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관광 관련 단체도 포함하는 방

안도 검토 중이다. 도에서는 16개 단체가 가입해 운영 중인 중단협이 사실상 친목 단체에 불과해 도의 여산 지원이 어려워 신규회원 가입 후 사단법인화를 추진,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의 경우 도내에는 중소기업

이 대부분이지만 중앙단체의 경우 대기업이 포함돼 있어 설립 초기 중소기업인들의 모임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또 포괄적으로 갈 경우 중소기업 활성화와 권익 보호, 현안 논의 등 전문적인 역할의 수행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신규회원 가입과 사단법인화 등의 이야기가 나오자 중단협은 4일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갖고 이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김보경기자 bkk@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지사체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40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자체가 발주한 수변 공원 공사 책임자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부서의 6급 계장은 대기성을 찾기 힘들다며 기소유예 처분하고 실무 책임자만을 재판에 넘겼다. 류재일기자

의료·바이오가 부러운 강원건설



한강-이란 경제협력

타 분야 중동수출 교두보에 건설만 한숨 협력업체 포함 관건 제도적 지원책 시급

'한강-이란 경제협력'으로 강원도 전략산업인 의료·바이오 분야는 중동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 기대에 찬 반면 해외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도내 건설사들은 울상이다. 3일 도 경제단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으로 최대 52조 규모의 각종 사업 수주 발판이 마련됐다.

업종별로는 △철도·도로·수자원

관리 등 인프라 건설 참여 121억2000만 달러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316억 달러 △보건·의료 18억 5000만 달러 등 최대 456억 달러 규모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이란 정부와 한국형 병원 건립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의료가기

분야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 분야의 경우 상황이다.

이번 '한강-이란 경제협력'으로도 로·철도·수자원 등 SOC 분야에 대한 수주 기회가 열렸지만 도내 건설사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형건설사들의 공사 수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들이 협력

업체로도 참여할 수 없다.

이는 도내 건설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해외 건설 공사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건설사들은 해외 공사 건설에 지역을 배려한 '지역의무' 할 당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계기로 건설업계의 중동 특수가 기대되지만 대형사에 국한될 것"이라며 "해외 건설에 있어 지역 업체들이 대형사의 협력업체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